

학교폭력 예방 대책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제안

조영선

(전교조 학생인권국,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I. 서론

1. ‘학교폭력 예방 대책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조사’ 목적
2. 조사 대상
3. 조사 기간 및 방법

II. 본론 / 교사들의 사교육 의식 실태 조사 분석 결과

1. 교육부의 학교 폭력 정책에 대한 평가
 - 가.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현장 효과성에 대한 평가
 - 나. 학교 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정책에 대한 평가
 - 다. 학교 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평가
2. 학교 폭력의 원인
 - 가. 학교 폭력의 주된 원인
 - 나. 학교 폭력이 학교에서 잘 감지되지 않는 이유
3. 학교 폭력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 가. 학교 폭력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행해져야할 정책
 - 나. 학교 폭력 처리 절차 개선방안

III. 결론

I. 서론

1. ‘학교폭력 예방 대책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조사’ 목적

2012년 대구 중학생 유서 사건이후 학교폭력은 전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교육부는 대대적인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쏟아내었다. 하지만 , 3200억을 쏟아 부었다는 교과부의 학교폭력근절대책에 대해 학교 현장의 학생과 교사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교육과정을 왜곡시키는 학교스포츠클럽 강제, 오래전 실패가 검증되었던 복수담임제의 졸속적 추진, 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등 교과부가 남발한 정책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국가교육정책에 대한 불신감만 키웠고, 여러모로 혼란이 일어났다. 정작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상처와 고통을 돌아보지 못한 채, 징계로 마무리되는 사법적 과정에만 급급한 1년이었다.

올해 역시 경산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자살 사건이 이어지고, 학교 폭력이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교육부에서는 수업시간에 학교폭력 실태 온라인 조사를 강행하는 등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본 조사는 전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학교 폭력 해결을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야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실질적인 학교 폭력 해결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실시 되었다.

2. 조사 대상

- 설문조사: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모두 포함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온라인회원 1007명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온라인 조사

		빈도	%
전체		1007	100%
경력	5년 미만	89	9.1%
	5년~9년	150	15.3%
	10년~19년	376	38.4%
	20년이상	365	37.2%
급별	초등학교	309	31.6%
	중학교	317	32.4%

	인문계고	296	30.2%
	전문계고	49	5.0%
	특수학교	8	.8%
설립별	국공립	817	85.0%
	사립	144	15.0%
성별	남	513	53.2%
	여	452	46.8%
지역	대도시	417	43.0%
	중소도시	381	39.3%
	읍면지역	171	17.6%
시도	강원도	45	4.6%
	경기도	230	23.5%
	경남	51	5.2%
	경북	56	5.7%
	광주	50	5.1%
	대구	47	4.8%
	대전	32	3.3%
	부산	39	4.0%
	서울	152	15.5%
	울산	24	2.4%
	인천	55	5.6%
	전남	75	7.7%
	전북	68	6.9%
	제주	13	1.3%
	충남	31	3.2%
	충북	12	1.2%
전교조	조합원	709	71.8%
	비조합원	279	28.2%

전국 교사들 1007명을 대상으로 교육현안인 학교 폭력 대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전국 16개 시도의 초·중·고에 근무하는 5년 이상의 경력교사가 다수 참여하였다.

3. 조사 기간 및 방법

- 설문조사: 2013년 4월 8부터 4월 23일까지 15일간, 온라인 조사로 진행했으며 질문 항목에 대한 교사들의 동의정도를 중심으로 설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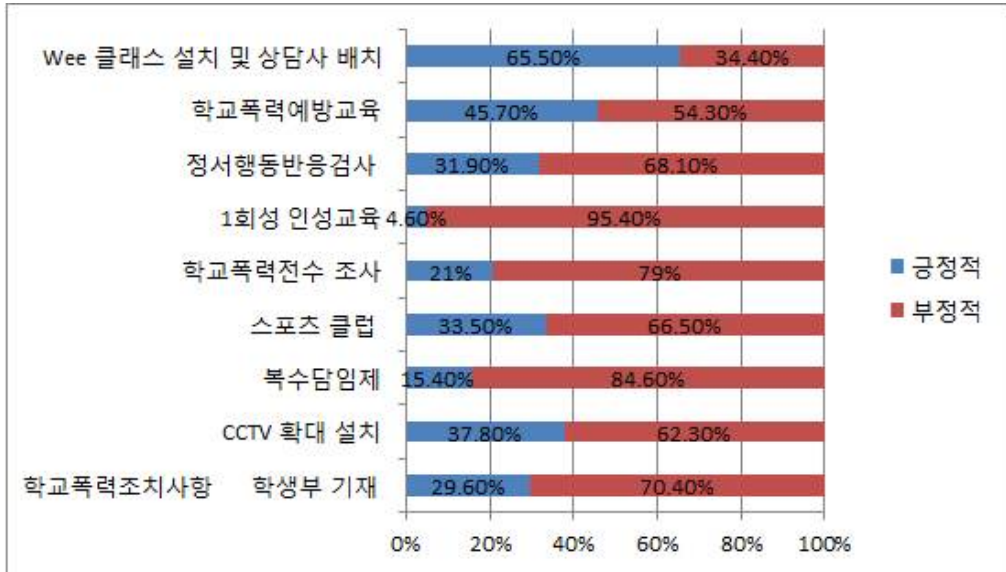
II. 본론

1. 교육부의 학교 폭력 정책에 대한 평가

가.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현장 효과성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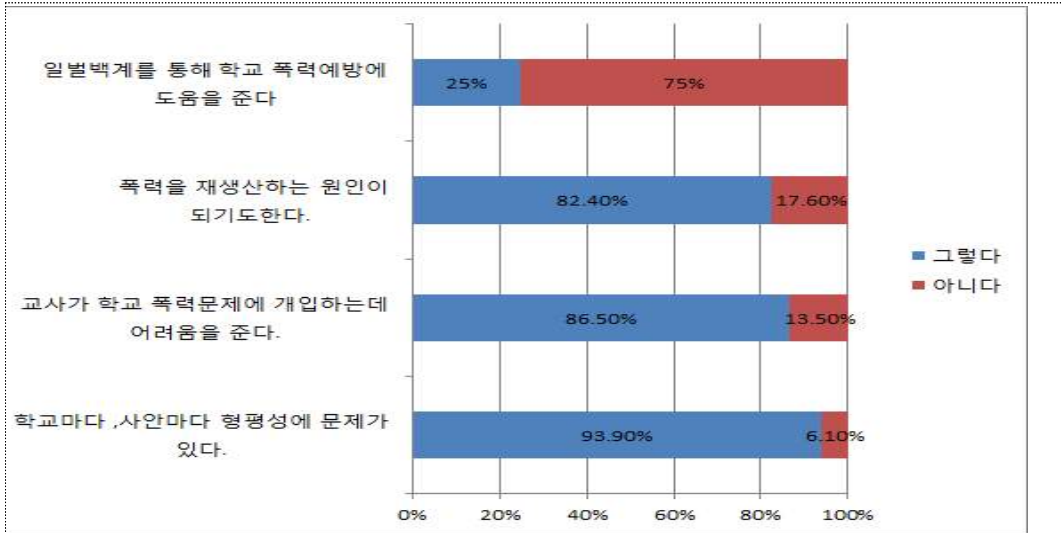
- 대다수의 교사들 70% 이상이 교과부 학교 폭력 대책이 학교폭력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폭력의 대표적인 대책들에 대해 Wee 클래스 설치 및 상담사 배치 외에 대부분의 학교폭력 대책은 현장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이었다. 이는 상담사 배치 등 학교 폭력 당사자의 치유를 돕는 회복적 시스템이 아닌 감시와 징벌 위주의 학교 폭력 대책이 효과가 없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예산을 이유로 전문상담사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여 학교 현장에 부담을 가중시켰다.
- 감시와 처벌 시스템의 강화 정책(학교 폭력 조치 사항 학생부 기재, CCTV확대설치)이 학교 폭력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각각 70.4%, 62.2%로 우세하였다.
- 1회성 인성교육 역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95.4%에 이르러 인성교육강화라는 교과부의 구호는 학교 현장에서는 허구임이 드러났다.
- 복수담임제 복수담임제에 대한 답변 역시 학교 폭력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84.6%였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노린 복수담임제는 전시성 행정에 예산 낭비로 마무리되었음을 보여주었다.
- 학교 폭력 전수조사와 정서행동반응검사 인권과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향상되어야만 감지될 수 있는 학교 폭력 실태를 기계적인 반응으로 알아내려고 했던 학교 폭력 전수조사(도움이 안되었다. 79.1%)와 정서행동반응검사(68.1%) 역시 학교 폭력실태를 알아내거나 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 학교 폭력이 조기에 감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는 학교 폭력 전수조사(도움이 안되었다. 79.1%)와 정서행동반응검사(68.1%) 역시 학교 폭력실태를 알아내거나 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 학교 폭력 신고율을 높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겠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폭력 예방교육은 학교 폭력 가해 행위 열거 및 사법 처리 양형 제시 위주의 1회성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83.2%) 학교 폭력이 감지되는데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생님은 다음 정책들이 학교 폭력의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십니까?



	매우 도움이 되었다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긍정적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부정적
학교 폭력 조치 사항 학생부 기재	①5.5%	②24.1%	29.6%	③42.3%	④28.1%	70.4%
CCTV 확대 설치	①6.3%	②31.5%	37.8%	③47.9%	④14.4%	62.2%
복수담임제	①1.7%	②13.7%	15.4%	③43.6%	④41.0%	84.6%
스포츠 클럽	①3.3%	②30.2%	33.5%	③45.3%	④21.2%	66.5%
학교폭력전수 조사	①2.5%	②18.5%	21%	③46.8%	④32.3%	79%
1회성 인성교육	①0.5%	②4.1%	4.6%	③51.3%	④44.1%	95.4%
정서행동반응검사	①2.5%	②29.4%	31.9%	③47.3%	④20.8%	68.1%
학교폭력예방교육	①3.8%	②41.9%	45.7%	③42.7%	④11.6%	54.3%
Wee 클래스 설치 및 상담사 배치	①14.7%	②50.9%	65.6%	③28.0%	④6.4%	34.4%

나. 학교 폭력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평가



학교 폭력 예방 대책 중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긍정적	대체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부정적
1) 대학진학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생기부 기재조치에 별로 신경쓰지 않아 실질적 효과가 없다.	①33.9%	②46.4%	80.3%	③16.5%	④3.3%	19.7%
2) 절도 등의 소년 사법 사항은 기록되지 않고, 학교마다 양형의 기준이 달라 형평성문제가 제기된다.	①47.1%	②46.8%	93.9%	③5.3%	④0.8%	6.1%
3) 생활기록부 기재로 오히려 가해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하고, 보복등 폭력을 재생산하는 경우도 있다.	①34.2%	②48.2%	82.4%	③16.4%	④1.3%	17.6%
4)징계 사항을 모두 이수했음에도 입시,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이중징계이다.	①39.5%	②38.1%	77.6%	③16.6%	④5.7%	22.4%
5) 입시, 취업등에 반영되기 때문에 서면 사과 등 낮은 수위도 모두 처벌이 된다.	①23.9%	②49.9%	73.8%	③22.6%	④3.6%	26.2%
6) 생기부 기재 지침이 졸업후 삭제로 변경되었지만 입시, 취업에 반영되는 것은 졸업전 기록이므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①28.9%	②54.8%	83.7%	③14.4%	④1.9%	16.3%

7) 생기부 기재 때문에 법적 다툼이 많아져 학교 폭력 사안에 개입하는 것을 꺼리게 만든다.	39.6 %	46.9 %	86.5 %	11.5 %	2.1 %	13.5 %
8) 일벌백계를 통해 학교 폭력의 근본적 예방에 도움이 된다.	①8.1 %	②16.9 %	25 %	③47.5 %	④27.5 %	75 %
9) 교육적 해결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에서 필요악의 성격이 있다	①16.9 %	②38.9 %	55.8 %	③29.5 %	④14.7 %	44.2 %
10) 학폭관련기록과 생기부 기록을 분리해야 한다.	①41.9 %	②36.8 %	78.7 %	③13.8 %	④7.5 %	21.3 %

- 학교 폭력 조치 사항 생기부 기재 70%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교사들이 학교 폭력 생활기록부 기재가 학교 폭력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하였다. <표1>
- 경력순 경력순으로 살펴보았을 때 5년이하 68.5% , 5년~ 9년 60%, 10년~19년 73.7%, 20년이상 72.9%로 나타나, 경력이 높은 교사일수록 학교 폭력 생기부 기재가 학생들에게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교육경력이 높을수록 학교 폭력 생활기록부 기재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생기부 기재 지침 변경으로 낙인효과가 보완되었다는 교과부의 의견과 달리 현장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83.7%에 이르렀다.
- 생기부 기재 이후 교사가 학교 폭력 사안에 개입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86.5%였다. 학교 폭력 예방과 대처에 가장 근접해있는 교사가 오히려 생기부 기재 정책 때문에 사안에 개입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 형평성문제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의견이 93.9%에 이르렀다.
- 교과부의 의견대로 생기부 기재가 일벌 백계를 통해 학교 폭력의 근본적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는 75%의 대다수 교사가 동의하지않았다.
- 필요악이라는 인식에 대해서도 절반 정도(55.8%)만 동의했다. 감시와 처벌 위주의 대책이 실제 효과가 미미하고 형평성 등 문제가 많음에도 다른 대책이 수반되지 않아 오히려 교사들이 문제적 대책을 필요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반교육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현재 생기부 기재에 대한 대안으로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에는 기록하되,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78.7%였다.

다. 학교 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평가

<표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내용이 학교현장에서는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주 잘 되고 있다.	대 체 잘 되고 있다.		대 체 로 안 되 고 있 다.	매 우 안 되 고 있 다.	
1) 학교 폭력 가해 행위 열거 및 사법 처리 양형 제시 위주의 1회성 교육	①26.5%	②56.7%	83.2	③15.6%	④1.1%	16.7
2) 일상적인 반차별 교육을 통한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①6.0%	②34.7%	40.7	③47.5%	④11.8%	59.3
3) 일상적인 참여, 자치 활성화를 통한 문제 해결력	①5.3%	②24.9%	30.2	③53.6%	④16.3%	69.9
4) 피해자 중심주의를 바탕으로한 공감능력	①6.7%	②35.3%	42	③47.8%	④10.1%	57.9
5)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방법및 관계 회복 방법	①6.2%	②29.0%	35.2	③51.1%	④13.7%	64.8
6) 일상적인 인권존중을 통한 인권 존중의 문화 조성	①6.7%	②29.2%	35.9	③47.1%	④17.0%	64.1

<표4>다음 중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우 그 렇 다	대 체 로 그 렇 다		별 로 그 렇 지 않 다	전 혀 그 렇 지 않 다	
1) 일상적인 반차별 교육을 통한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①59.3%	②33.8%	93.1	③6.1%	④0.8%	6.9
2) 일상적인 참여, 자치 활성화를 통한 문제 해결력	①56.2%	②36.6%	92.8	③6.5%	④0.7%	7.2
3) 피해자 중심주의를 바탕으로한 공감능력	①55.4%	②39.0%	94.4	③4.7%	④0.9%	5.6
4)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방법및 관계 회복 방법	①66.3%	②30.8%	97.1	③2.5%	④0.5%	3
5) 일상적인 인권존중을 통한 인권 존중의 문화 조성	①66.7%	②28.4%	95.1	③4.2%	④0.7%	4.9

-학교 폭력 예방교육은 주로 학교 폭력 가해 행위 열거 및 사법 처리 양형 제시 위주의 1회성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83.2%이었다.

- 교사들이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교육으로 꼽은 내용은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방법및 관계 회복 방법’, ‘일상적인 인권존중을 통한 인권 존중의 문화 조성,’, ‘피해자 중심주의를 바탕으로한 공감능력’ 이었으나 실제적으로는 거의 이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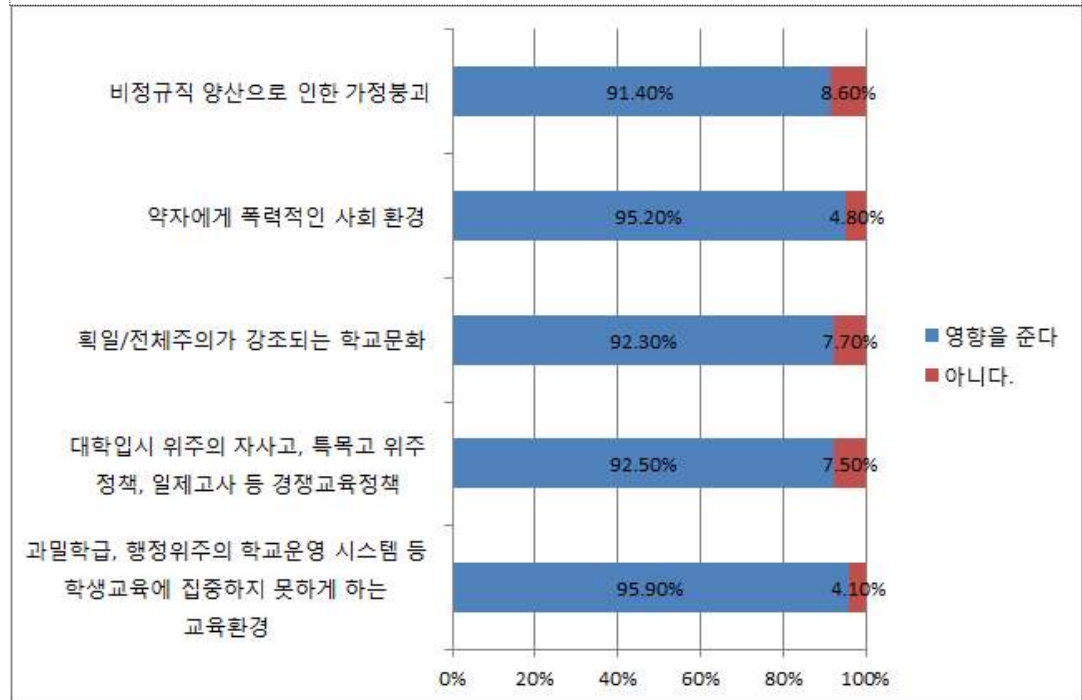
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폭력 예방에 꼭 필요하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교육	필요하다	실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방법 및 관계 회복 방법	97.1%	64.8%
일상적인 인권존중을 통한 인권 존중의 문화 조성	95.1%	64.1%
피해자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한 공감능력	94.4%	57.9%
일상적인 반차별 교육을 통한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93.1%	59.3%
일상적인 참여, 자치 활성화를 통한 문제 해결력	92.8%	69.9%

2. 학교 폭력의 원인

가. 학교 폭력의 주된 원인

다음 여러 요소들이 학교 폭력이 증가하거나 사라지지 않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영향을 준다.	대 로 영향을 주 지 않 다	정 적 고 정	대 로 영향을 주 지 않 다.	별 로 영향을 주 지 않 다.	부 적 정
1)과밀학급, 행정위주의 학교운영 시스템 등 학생교육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교육환경	①72.4%	②23.5%	95.9%	③2.7%	④1.4%	4.1%
2)대학입시 위주의 자사고, 특목고 위주 정책, 일제고사 등 경쟁교육정책	①73.6%	②18.9%	92.5%	③5.5%	④2.1%	7.5%
3) 획일/전체주의가 강조되는 학교문화	①65.5%	②26.8%	92.3%	③6.6%	④1.1%	7.7%
4) 학교 운영과 학생생활지도에서의 인권/민주주의 요소 부재	①44.4%	②40.1%	84.5%	③13.1%	④2.4%	15.5%
5)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학생자치활동의 부재	①40.0%	②45.6%	85.6%	③13.6%	④0.8%	14.4%
6)일진 문화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	42.1%	41.2%	83.3%	15.4%	1.4%	16.8%
7)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근본적 처방미약	①31.8%	②39.8%	71.6%	③25.1%	④0.3%	28.4%
8)CCTV 등 학교 폭력 감시시스템의 부재	①12.5%	②28.5%	41%	③48.8%	④10.2%	59%
9) 약자에게 폭력적인 사회환경	①61.8%	②33.4%	95.2%	③4.2%	④.6%	4.8%
10)비정규직 양산, 사회양극화로 인한 가정 붕괴	①59.2%	②32.2%	91.4%	③6.8%	④1.8%	8.6%

-학교 폭력이 사그러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들 자체 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원

인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비정규직 양산, 사회양극화로 인한 가정붕괴’를 학교 폭력의 원인으로 뽑은 의견도 91.4%에 이르렀고, ‘약자에게 폭력적인 사회환경’을 원인으로 뽑은 의견도 95.2%에 이르렀는데 사회양극화로 인해 중산층이 해체되고, 사회 안전망이 부재한 가운데 학생들의 무력감과 불안심리가 공격으로 표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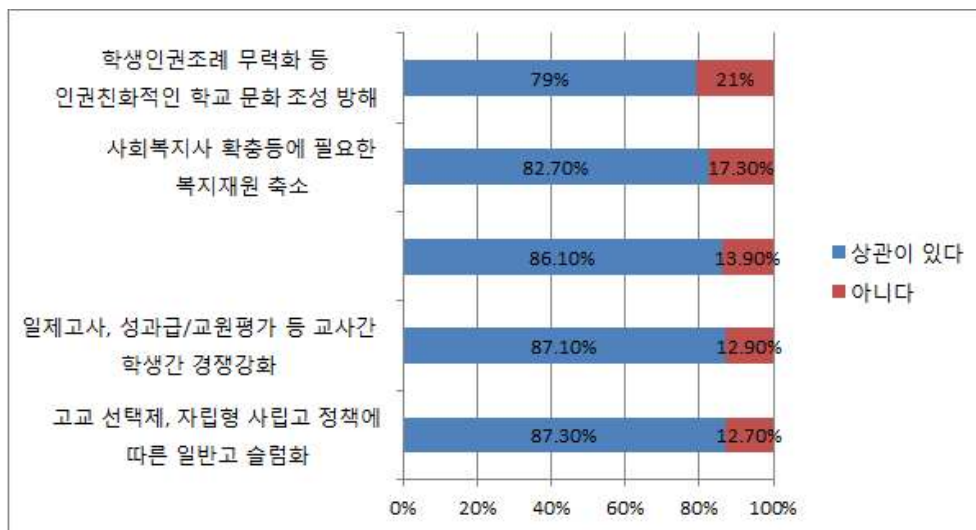
- 과밀학급, 행정위주의 학교운영 시스템 등 학생교육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학교 폭력의 원인으로 뽑은 의견이 95.9%였다. 학교 폭력은 학생들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의 관계맺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할 수 없는 교육 환경이 학교 폭력을 증가하는 토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확실적이고 전체적인 학교 문화와 학교 운영과 학생생활지도에서의 인권/민주주의 요소 부재를 학교 폭력의 원인으로 뽑은 의견도 각각 92.3%, 84.5%에 이르렀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학생자치활동의 부재를 학교 폭력의 원인으로 뽑은 의견도 84.5%나 되었다. 이는 학생들이 개개인의 다양성과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참여와 자치의 경험을 하지 못한 학생들이 타인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폭력에 쉽게 물들 뿐아니라,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공격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교과부가 주장하는 CCTV등 학교 폭력 감시시스템의 부재를 학교 폭력의 원인으로 뽑은 의견은 41%에 불과했다.

나. 교과부의 교육정책과 학교폭력의 관계

다음의 교과부의 교육정책이 학교폭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다	대체 그 렇다	긍정 적	대체로 그 렇지 않다	매우 그 지 다	부정적
1) 고교 선택제, 자립형 사립고 정책에 따른 일반고 슬럼화	①52.7%	②34.6%	87.3%	③10.0%	④2.7%	12.7%
2) 일제고사, 성과급/교원평가 등 교사간 학생간 경쟁강화	①60.9%	②26.2%	87.1%	③10.2%	④2.7%	12.9%
3) 전문상담가, 지역사회전문가 등 학교 폭력해결을 위한 전문가 집단의 불안정한 배치	①40.4%	②45.7%	86.1%	③12.1%	④1.8%	13.9%
4) 사회복지사 확충등에 필요한 복지재원 축소	①37.0%	②45.7%	82.7%	③14.9%	④2.4%	17.3%
5)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등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 방해	①40.0%	②39.0%	79%	③15.7%	④5.3%	21%

-학교폭력을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교육부가 한편으로는 학교폭력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정책들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쟁교육정책이 학교 폭력에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87%, 전문상담가, 지역사회전문가 등 학교 폭력해결을 위한 전문가 집단의 불안정한 배치가 학교 폭력 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의견도 86.1%였다. 즉 학교 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성과 학교 자율화의 외피를 쓴 고교선택제, 자립형사립고 정책, 일제고사 등의 경쟁교육 정책이 실제로는 학교 폭력 심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극심한 학업 경쟁 속에 내몰린 학생들이 일찍 자신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무력감에 젖거나 입시 경쟁으로 끝까지 내몰림으로써 이 과정에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타인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학교내 비정규직의 증가, 학교 폭력 지원인력의 비정규직 채용이 학생과의 안정적인 만남, 책임있는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학교폭력 해결에 어려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인권정책이 학교 폭력을 부추긴다는 통념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폭력 해결을 외치는 교육부가 소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했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격이 오히려 학교 폭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79%였다.

나. 학교 폭력이 학교에서 잘 감지되지 않는 이유

1)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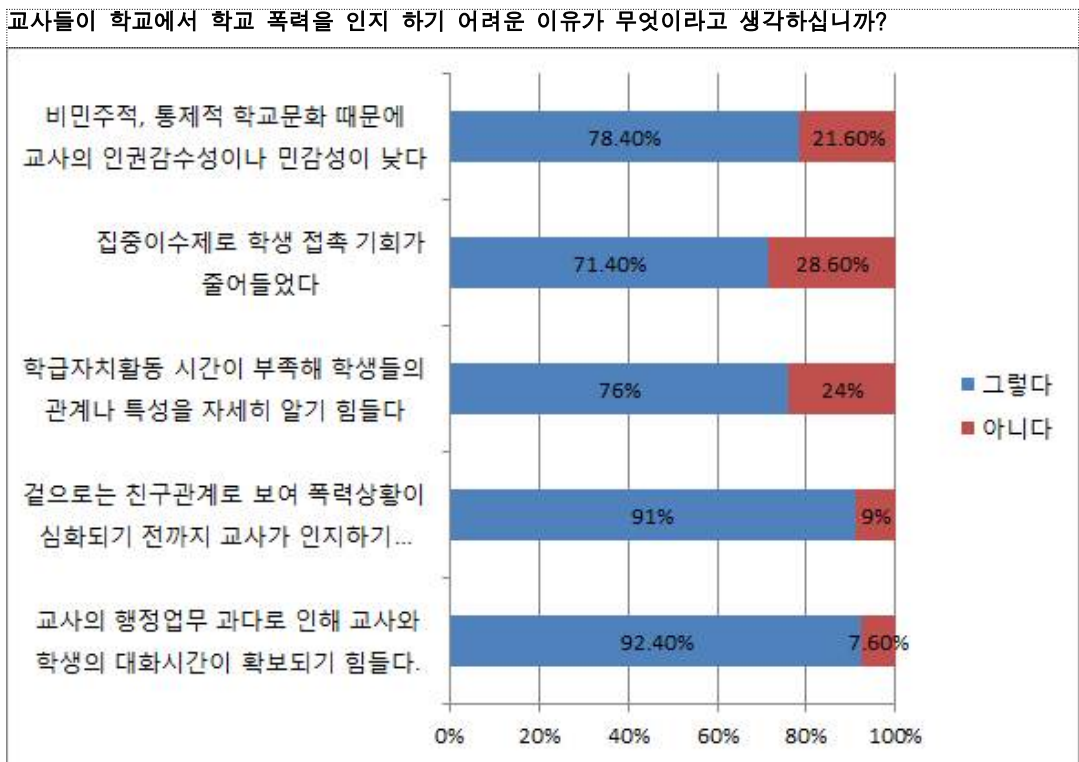
학생들이 학교 폭력 상황을 교사나 학교에 알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 러다	대 체 로 그 러다	긍 정 적	대체로 그 러지 않다	매 우 그 지 않	부 정 적
보복이나 재발 방지에 대한 불신 이 크다.	①61.6 %	②36 .0%	97.6	③2.2%	④.2%	2.4
학교폭력 해당 행위와 처벌 양 형 위주의 예방교육으로는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기 힘들다	①39.5 %	②49 .9%	89.4	③8.9%	④1.7 %	10.6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이 낮아 폭 력 상황이 심화되기 전까지 신고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한다.	①26.5 %	②46 .9%	73.4	③23.0%	④26. 6%	49.6
피해 학생들이 친구 관계 때문에 폭력 문제를 드러내기 꺼려한다.	①40.6 %	②49 .4%	90	③9.0%	④1.0 %	10
피해 학생들이 자신의 피해 상황 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수치스럽 게 생각한다.	29.4%	53.1 %	82.5	15.9%	1.5%	17.4
징계/사법처벌 위주의 처리 방식 때문에 증거가 명확해질 때까지 신 고하기가 어렵다	①26.7 %	②45 .4%	72.1	③25.7%	④2.2 %	27.9

-학생들이 학교 폭력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로 97.6%의 교사가 보복이나 재발방지나 대한 불신이라고 응답하였다. 교과부가 학교 폭력 해결을 공언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실제로 학교 폭력 해결절차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 폭력 예방교육으로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기 어렵다는 것을 학교 폭력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로 꼽은 의견도 89.4%에 이르렀고,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이 낮아 폭력 상황이 심화되기 전까지 신고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73.4%였다. 개개인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지 못한 학생들이 타인에 대한 폭력도 쉽게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이 당연히 문제제기 해야할 인권침해가 아니라 본인이 부끄러워해야한다고 여겨 폭력 상황이 심해지기 전까지 드러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관계 안에서의 폭력을 드러내기 어려워한다는 의견이 90%, 피해 학생들이 자신의 피해 상황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는 의견이 82.5%였다. 즉 학교 폭력은 이미 같은 반 친구, 같은 학교 친구라는 관계안에서의 폭력으로 관계가 깨지거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줄거라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쉽게 신고하기 어렵다. 또, 교사-학생 관계든 학생-학생간의 관계든 관계안에서 존중해야할 인권이 있어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관계속에서 학생들이 폭력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채 신고와 처벌 위주의 학교 폭력 해결절차와 이를 안내하는 예방교육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 징계/사법처벌 위주의 처리 방식 때문에 증거가 명확해질 때까지 신고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72.1%였다. 이는 엄벌위주의 방식이 오히려 학교 폭력이 감지 이후에도 증거가 명확해질 때까지 오히려 교육적 개입을 하기가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교사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미정적	대체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부정
교사의 행정업무 과다로 인해 교사와 학생의 대화시간이 확보되기 힘들다.	①56.3%	②36.1%	92.4%	③6.8%	④.8%	7.6
겉으로는 친구관계로 보여 폭력상황이 심화되기 전까지 교사가 인지하기 어렵다	①39.0%	②52.0%	91%	③8.1%	④0.9%	9
학급자치활동 시간이 부족해 학생들의 관계나 특성을 자세히 알기 힘들다	①29.5%	②46.5%	76%	③22.4%	④1.6%	24%
집중이수제로 학생 접촉 기회가 줄어들었다	①29.0%	②42.4%	71.4%	③25.5%	④3.1%	28.6%
비민주적, 통제적 학교문화 때문에 교사의 인권감수성이나 민감성이 낮다	①35.9%	②42.5%	78.4%	③17.9%	④3.7%	21.6%

교사들이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인지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교사의 행정업무 과다로 교사와 학생의 대화시간이 확보되기 힘들다는 응답에 92.4%가 동의 하였다. 즉 수업과 학생들과의 만남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교육환경이 때문에 교사가 학교 폭력을 감지하기 어려운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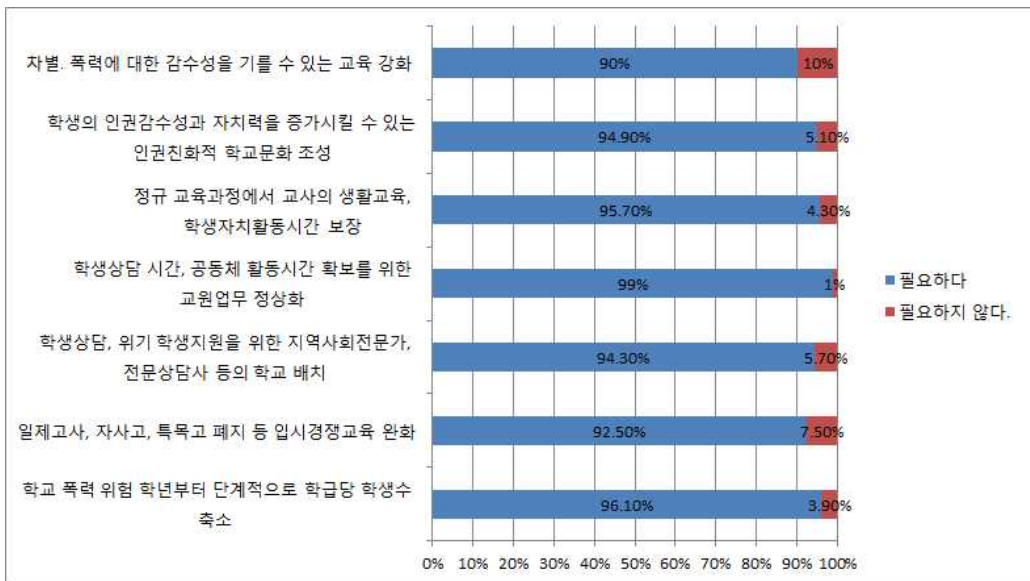
- 비민주적, 통제적 학교문화 때문에 교사의 인권감수성이나 민감성이 낮아서 학교 폭력 감지가 어렵다는 답변도 78.4%였다. 지시와 통제가 일상화된 수직적인 문화에 있다 보니 학생들간의 지시와 통제를 폭력으로 문제시하여 감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 학급자치활동 시간이 부족해 학생들의 관계나 특성을 자세히 알기 힘들다는 의견도 76%였고, 집중이수제로 학생접촉기회가 줄어들었다는 의견도 71.4%였다. 학생의 학업부담을 줄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하겠다는 모토로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파생된 집중이수제 등 파행적 교육과정이 오히려 학교 폭력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

이다. 개정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자치활동시간이 흡수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치활동시간이 부족해졌고, 집중이수제로 한 학기에 한과목을 마치는 등 어느 학기에는 수업시간에 학생을 만나지 못한채 담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학생들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기 어려운 것이다.

3. 학교 폭력의 원인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가. 학교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변화

학교 폭력 해결의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매우 필요하다.	대체 필요하다	긍정적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부정적
1) 학교 폭력 위험 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학급당 학생수 축소	①72.4%	②23.7%	96.1%	③3.3%	④.6%	3.9%
2) 일제고사, 자사고, 특목고 폐지 등 입시경쟁교육 완화	①68.4%	②24.1%	92.5%	③5.7%	④1.8%	7.5%
3) 학생상담, 위기 학생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전문가, 전문상담사 등의 학교 배치	①63.8%	②30.5%	94.3%	③5.0%	④0.7%	5.7%
4) 학생상담 시간, 공동체 활동시간 확보를 위한 교원업무 정상화	①76.3%	②22.7%	99%	③0.7%	④0.3%	1%
5) 정규 교육과정에서 교사의 생활교육, 학생자치활동시간 보장	64.9%	30.8%	95.7%	4.0%	0.3%	4.3%
6) 학생의 인권감수성과 자치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①69.5%	②25.4%	94.9%	③3.7%	④1.4%	5.1%
7)차별·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 강화	63.8%	26.2%	90%	2.4%	0.6%	3%

-학교 폭력 해결의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로는 학생상담 시간, 공동체 활동시간 확보를 위한 교원업무 정상화를 뽑은 교사가 99%, 학교 폭력 위험 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학급당 학생수 축소를 꼽은 의견이 96.1%. 즉,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는 교육 여건 조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 학생상담, 위기 학생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전문가, 전문상담사 등의 학교 배치를 꼽은 의견도 94.3%였다. 이는 학교 폭력의 가, 피해자 지원과 일상적인 상담활동 지원, 위기 가정 등에 각종 복지 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 상담가와 지역사회전문가의 지원이 학교 현장에 절실함을 보여준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교사의 생활교육, 학생자치활동시간보장을 꼽은 의견이 95.7%, 차별·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90%, 학생의 인권감수성과 자치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조성을 꼽은 의견이 94.9%로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자치를 촉진하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조성이야말로 학교 폭력이 해결될 수 있는 토양임을 보여준다.

나.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 변화 방향

현재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제안들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매우 필요	대체로 필요	그정적	대체로 불필요	매우 불필요	부정적
1) 1차 중재조정 절차 의무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부 시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존중하여 판단한다는 전제하에 1차 중재 조정 절차를 의무화 한다.)	①47.5%	②46.1%	93.6%	③5.1%	④1.3%	6.4%
2)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가 단순히 양형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적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구성원에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중재 조정전문가를 포함시킨다.	①57.0%	②35.2%	92.2%	③6.7%	④1.1%	7.8%
3)가,피해자 외 폭력 발생한 공동체 단위 인권 교육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 가, 피해자 당사자 이외에도 가, 피해자가 속한 학급단위 상담 및 치료, 인권교육을 제도화한다)	①54.3%	②38.8%	93.1%	③6.0%	④0.9%	6.9%
4) 학교폭력 지원 협력 인프라 구축 의무화 학교 폭력자치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중재조정 전문가를 확충하고 스쿨폴리스처럼 전담 체재를 갖춘 인력풀 조성을 의무화한다.	①57.5%	②35.5%	93%	③5.9%	④1.0%	6.9%
5) 가해, 피해 학생의 변론 및 재심 기회 보장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오류를 줄이기 위해 가해, 피해 학생의 변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재심기회를 보장한다.	①49.5%	②42.3%	91.8%	③6.9%	④1.3%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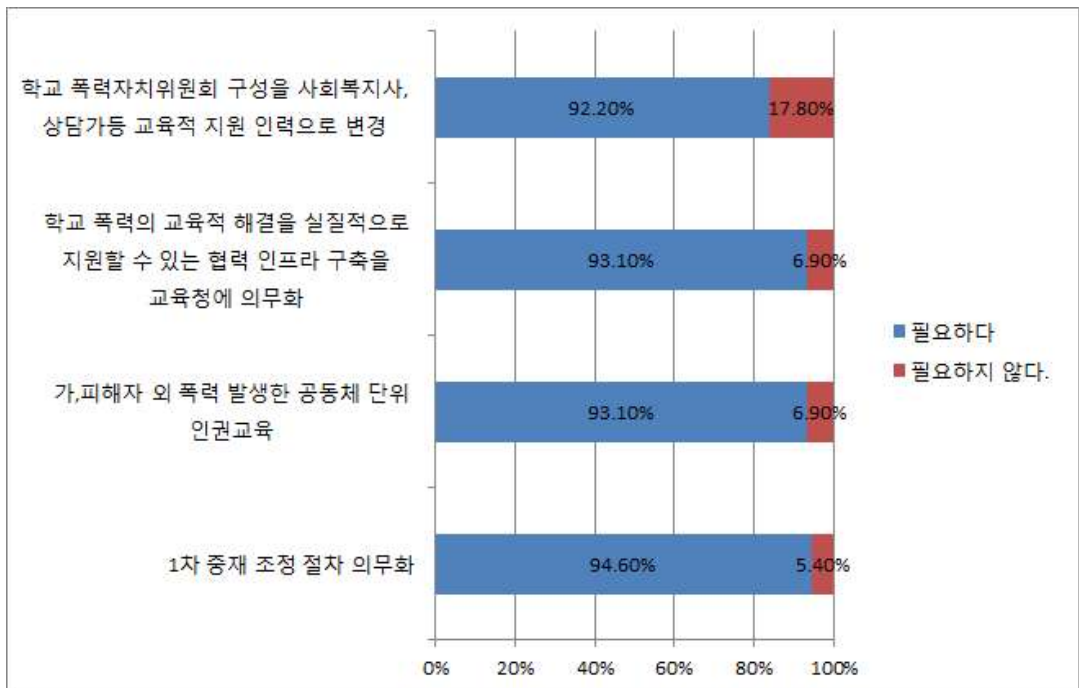
-현 학교 폭력 해결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으로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부시 화해 조정 절차가 마련되어야한다는 의견이 93.6%였다. 즉 가해 학생을 숙아내고, 배제하는 사법처리 위주의 학교폭력 해결방식보다는 가, 피해 학생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과정과 절차를 마련하는 해결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생기부 기재 정책 이후 학교 폭력의 실질적 해결기구로 기능해야할 학교 폭력 자

치위원회가 가해자의 형량을 판단하는 사법기구로 전락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 심의 전 화해,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학교 폭력 처리가 관계의 단절이 아닌 관계의 회복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절차화하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가 단순히 양형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적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구성원에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중재 조정전문가를 포함되도록 현재 학부모와 교원으로만 이루어진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해야한다는 의견이 92.2%**, 학교 폭력자치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중재조정 전문가를 확충하고 스쿨폴리스처럼 전담 체제를 갖춘 인력풀 조성을 의무화한다는 의견이 93%였다. 이는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가 실질적인 가, 피해자 지원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 피해자 외 학교폭력이 발생한 공동체 단위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3.1%로 학교 폭력 문제를 단순히 가,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접근할 때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고, 폭력 사건 처리 이후 관계 회복이나 학교 생활 적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Ⅲ. 결론

1. 징벌 중심의 학교 폭력 해결절차를 교육 중심의 회복적 절차로 전환

가. 학교폭력 대응절차에서 화해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학교 폭력 가, 피해자 실질적 지원 중심의 솔루션 체제로 개편,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복지 시스템 확충

-현 학교 폭력 해결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으로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부시 화해 조정 절차가 마련되어야한다는 의견이 93.6%였다. 즉 가해 학생을 숙아내고, 배제하는 사법처리 위주의 학교폭력 해결방식보다는 가, 피해 학생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과정과 절차를 마련하는 해결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는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자치기구로 설치되었으나 현재 학교 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이후 학교 폭력 가해자의 형량을 판단하는 사법조치기구로 전락하였다. 하지만, 실제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 이후 가해 학생이 처벌을 받는 다고 해서 학교 폭력으로 인한 피해 학생의 상처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경우 이혼, 경제적 궁핍 등 일상적인 돌봄에서 배제되어 있거나 과거에 가정이나 학교에서 학교 폭력 피해경험을 갖고 있거나 억압적인 관계에서 오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경우에도 오랜 학교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자존감 상실, 재발에 대한 우려, 신고자라는 공동체에서의 낙인으로 인한 소외감에 대한 두려움 등 심리적 상처를 갖고 있다. 지역사회전문가는 일상적인 돌봄에서 배제된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결시키고, 일상적인 삶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오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전문상담가의 치유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보다 많은 인력이 안정적으로 배치될 때, 단순히 사법적 조치만이 아닌 교육적 지원과 치유적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다.

나.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조치를 철회

학교 폭력 생기부 기재 역시, 70%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교사들이 학교 폭력 생활기록부 기재가 학교 폭력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하였고 교사의 학교 폭력 개입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답변도 86.5%에 이르렀다. 앞에서 약속했듯 학교 폭력 생활기록부 기재는 학교 폭력 억제에 아무런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학생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을 은폐하게 하거나 교사로 하여금 학교 폭력에 개입하는 데 어렵게 하고 있다. 학교 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도 학교 폭력 생활기록부 기재는 즉각 철회되어야한다.

2.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적 조치가 가능한 교육여건 조성

가. 학교폭력 위험학년부터 학급당 학생수 즉각 감축, 학급-학년 중심 교원업무체계 마련 등 교사의 생활교육 여건을 확보

학교 폭력 해결의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로는 학생상담 시간, 공동체 활동시간 확보를 위한 교원업무 정상화를 뽑은 교사가 99%, 학교 폭력 위험 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학급당 학생수 축소를 꼽은 의견이 96.1%. 즉,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는 교육 여건 조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많은 교사들이 학교 폭력의 원인으로 과밀학급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꼽았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났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지 못함을 호소하고 있다. 학생과의 관계, 교사-학생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교사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처리하는 시간을 줄이고, 수업과 학생과의 만남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현재 행정업무 중심의 교원업무를 학급-학년 중심의 교원업무 체계로 개편해야한다. 교사와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학교에서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의 삶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과 공간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평화로운 관계 형성은 불가능하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으로 교육이 가능한 학교만들기를 통해서만이 학교 폭력 해결은 가능할 것이다.

나. 일제고사, 고교서열화 등 경쟁교육특권교육 폐지

일제고사, 고교 서열화 등의 경쟁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은 조기에 학업에 대한 의욕을 잃고 절망감에 빠지거나 극심한 경쟁 스트레스로 관계 맺음에 실패하고 있다. 학생들의 무기력과 절망, 스트레스가 타인에 대한 공격심리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쟁위주의 교육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한다.

3. 인권과 평화의 학교 문화 조성 및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학생 참여 역량 강화

가.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생활교육을 위해 학생인권법 제정 및 학생인권조례 안착화를 지원

정규 교육과정에서 교사의 생활교육, 학생자치활동시간보장을 꼽은 의견이 95.7%, 차별·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90%, 학생의 인권감수성과 자치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조성을 꼽은 의견이 94.9%였다. . 교육부는 학생인권 보장을 학교 폭력의 원인으로 호도했지만, 다양성을 인정받고 인격체로 존중받아온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차별과 그 차별에 따른 폭력을 당연하게 여긴다. 학생들이 학교 폭력 문제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도 통제적인 문화속에서 인권감수성이 함양되지 못하고 타인에 대한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민주적, 통제적 학교문화 때문에 교사의 인권감수성이나 민감성이 낮아서

학교 폭력 감지가 어렵다는 답변도 78.4%로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통제적인 문화속에서 교사 조차 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낮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대다수 교사들의 의견이었다. 따라서,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자치를 촉진하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조성이야말로 학교 폭력이 해결될 수 있는 토양임을 보여준다.

나. 학생의 주체적인 인권·평화 감수성 향상을 통한 관계력 회복을 위해 주1회 학급회의 실질화 등 정규 교육과정 내 학생 참여권을 보장

학교 폭력 이 일어나는 근본원인은 교사-학생, 학생-학생들간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못한 탓이 크다. 실제 교사가 학교 폭력 문제를 감지 하지 못하는 이유로 학급자치활동 시간이 부족해 학생들의 관계나 특성을 자세히 알기 힘들다는 의견도 76%였고, 집중이수제로 학생접촉기회가 줄어들었다는 의견도 71.4%였다. 실제로 학교 폭력 해결을 위해 정규 교육과정에서 교사의 생활교육, 학생자치활동시간보장을 꼽은 의견이 95.7%였다. 학생들과의 만남을 가꾸려해도 정규 교육시간에 안정적으로 그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7차 교육과정 이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통합되면서 사라진 학급회의 등의 학생자치활동시간을 정기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 학생들이 학교 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해결의 주체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선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학생자치활동의 부재’를 학교 폭력의 원인으로 뽑은 의견도 85.6%에 이르렀다. 또, 92.8%의 교사가 일상적인 참여, 자치 활성화를 통한 문제 해결력을 함양하는 것이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즉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주체로 나설 수 있을 때 학교 폭력 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모든 학교 구성원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의 인권·평화감수성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질화

학교에서 한달에 한번씩 학교 폭력 예방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학교 폭력 예방교육은 주로 학교 폭력 가해 행위 열거 및 사법 처리 양형 제시 위주의 1회성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83.2%이었다. 교사들이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교육으로 꼽은 내용은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방법 및 관계 회복 방법’, ‘일상적인 인권존중을 통한 인권 존중의 문화 조성’, ‘피해자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한 공감 능력’이었으나 실제적으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 해결의 원칙으로 인권과 평화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인권, 평화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어야한다. 특히 학생들간의 갈등을 해결해야하는 학교 폭력 자치위원들의 인권평화 역량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모든 구성원의 인권·평화 감수성 향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